

“갑작스런 품종 전환엔 농업 현장 혼란 불보듯”

신동진, 퇴출 기준 570kg 안넘어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 한계 '강대찬' 품종간 맛·품질 달라 길들여진 입맛 탓 외면 우려도



광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광주통합RPC 창고에서 한 관계자가 쌓여있는 공공비축미를 살펴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다수확 품종 쌀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농업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매와 종자보급 중단으로 사실상 '퇴출' 대상인 신동진 벼는 전남도내 쌀 생산면적의 20% 가까이 차지한 데다 대체품종인 '강대찬' 품종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신동진 벼가 다수확 쌀로 취급되고 있지만 실제 전남도내 생산량은 정부가 정한 퇴출 기준인 570kg(10a 기준)를 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22개 시·군 등에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품종을 2024년부터 '강대찬'으로 전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신동진과 강대찬 품종간의 맛과 품질 등이 달라 기존 입맛에 길들여진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때문에 정부의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신서호 전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실 연구사는 “정부의 정책은 쌀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면서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강대찬 품종이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현재 신동진 재배면적은 정부 정책이 아니어도 자연 순감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신

동진벼 재배면적은 2020년 4만802ha(25.1%), 2021년 3만9836ha(25.6%), 2022년 3만632ha(19.8%)로 집계됐다. 신 연구사는 이어 “신동진이 통계상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작년 기준 전남도내 신동진 쌀 생산량은 10a 기준 487kg에 그쳤다. 새정무(545kg)보다 적은 수치로 친환경 재배와 기후 등의 영향

으로 신동진이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지역은 현재 새정무 품종이 재배면적의 50% 넘게 재배되고 있다. 갑작스런 품종전환은 생산량 감소, 재배방식 변화 등 농가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강대찬 품종이 과연 쌀 소비시장에서 신동진 품질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일선 농업 현장에서도 신동진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을 놓고 우려를 표했다.

박광은 전남쌀전업농협회장은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전북의 경우 참동진, 전남의 경우 강대찬 품종이 내년부터 전환될 예정이다. 강대찬의 주요 특징은 병충해에 강하고 쓰러짐(도복)에 강하다”며 “농약·비료값이 비싸지면서 농가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강대찬 재배에 몰릴 경우, 신동진과 마찬가지로 도태될까 걱정스럽다. 생산자·소비자 경제시장을 면밀히 살펴 정책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농협의 한 관계자는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쌀 품종 가운데 신동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밥이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턱대고 품종전환을 나설 경우 쌀 소비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소비감소, 가격하락 속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자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다.

조경웅 전남농협본부 양곡자재과 과장은 “쌀 수급정책 방안 일환으로 정부가 신동진벼 매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새품종개발과 속도조절을 비롯해 쌀 소비시장을 명확히 분석 등이 이뤄진다면 이번 정책을 통해 과잉생산되는 쌀의 적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용 기자 jinyoung.cho@jnilbo.com

광주시민 63% “권역별 비례대표제 찬성”

민주 광주시당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권역별과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6~17일 광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3.4%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반대는 23.6%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권

역으로 보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전국을 몇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 균형을 위해 지역별 인구수를 보정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수를 배분하는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61.3%, '비공감' 의견이 24.7%로 공감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구 의석과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

대표제(제20대 총선까지 실시)와 지역구 의석을 포함한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는 연동형이 43.0%, 병립형이 38.3%로 오차범위 내에서 선호도가 나뉘었다.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정했을 때,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는 소선거구제 41.7%, 중선거구제 39.9%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4개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선호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가 24.3%,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현행 제도)가 25.4%, 동농복합 중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6.9%,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6.4%로 조사됐다.

이 중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결합해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 농촌·소도시는 소선거구를 실시하는 동농복합 중선거구제는 찬성 62.5%, 반대 24.6%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다.

각 선거제도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안에 대해 시민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갈려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각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선거구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비례대표 수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는 '국회의원 세비의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비공감 47.9%, 공감 38.8%로 나타났다.

이병훈 광주시당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시민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시민 의견,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 3월 중순께 국회와 중앙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 조사 형태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광산구보건소가 하남3지구 신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합니다



업무개시일 2023년 5월중

이전장소 광산구흑석동 631번지 (하남3지구 광산소방서 부근)

이전부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 보건소 이전 후 송정보건지소별도 운영예정 (보건증, 예방접종, 물리치료실 업무 하지 않음)

문의: 062-616-5829, 5828